



양주시, 농어발전 위한 시장초정 간담회개회

지난 5일 한농연합주시연합회(회장 정수영)는 임춘빈 양주시장을 초청, 양주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일 광적면 비암리 정수영 회장 자택에서 임춘빈 시장을 비롯한 유재원 도의원, 이종호 시의회 부의장, 농업관련단체장,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 회장은 "양주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농업기반 붕괴에 따른 농업생산성 악화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며 "지역농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춘빈 시장은 "지역농업·경제 발전에 헌신해 준 농업경영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양주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경시위' 나선 박운성 한농연합정읍시연합회장



지난 18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한농연합전북도연합회와 정읍시연합회, 전농전북도연맹과 정읍시농민회가 주축이 된 농민 600여명은 '특별재해지역선포와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북농민대회'를 갖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정읍시 박운성 회장은 "가을수확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인데도 정부는 피해액이나 이재민수 등이 많지 않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상경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박 회장은 "정읍지역의 경우 군에서는 28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작물 침·관수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을 고려해 농민단체들이 추정해본 결과 100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농로나 논두렁 유실 등의 간접피해를 더하면 피해규모는 더 크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 특히 마을이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우리 마을이 35호 정도 되는데 27~28호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폭우에 따른 피해신고를 받았지만 신고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노인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운성 회장은 "피해를 입은 지 몇몇 일이 지나 갔고, 국회의장이나 농림부장관이 수해현장을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건전경마추진위, "마사회 진흥·축산발전 여행", 내년부터 2%로 환원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는 최근 축산회관에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입법추진은 농촌발전 재원마련을 저해는 물론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교육세 환원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농촌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부과를 반대하는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지난 16일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위원회의 실무 집행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 장관면담과 항의 집회 등의 구체적인 활동도 준비하는 등 대외압박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마관련 시민단체들도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를 조직해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 달 만에 3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1조 7000억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경마팬들은 다른 경마 시행국에 비해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 경마와 관련없는 교육세를 영구 과세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년간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지방교육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초 약속대로 2006년부터 세율을 현행 6%에서 2%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쌀협상국회비준저지비대위, 중앙일보 항의방문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국회비준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농업, 반농민적 왜곡·편파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3대 신문사로 자처하는 중앙일보가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중앙일보는 8월 18일자 사설과 뉴스분석을 통해 쌀협상안 국회비준을 앞두고 농민단체가 요구한 20여가지의 정책건의 중 16건을 수용함으로써 버티고 보체다보면 결국 더 얻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식으로 정부와 농민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보는 농업이 가지는 소중함이나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삼성홀플러스의 중국산 김치판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반농업, 반농민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왜곡편파 보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